"고부가 섬유산업 전환 앞장서달라"

김관영 지사,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업무보고… 안전보호용 섬유소재 기술수준 높여 전문기업유치 등 논의

김관영 도지사는 도내 섬유산업이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북도 출연 전문연구기관의 역할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27일 익산에 소재한 섬유 전문연구기관인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을 방문해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안전보호용복합섬유 기술개발과 관련한 주요 시설을 시찰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연구원의 최신 기술과 연구개발 상황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며 연구원은 기본 의류부터 산업용까지 아우르는 융복합 섬유, 친환경 소재 기술개발을 통해 도내 섬유·패션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현장에서 연구원의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연구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지속가능한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 전라북도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며, 섬유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방문 중 연구원의 주요 시설인 안전보호용복합섬유 기술지원센터를 둘러보면서 "국내 안전보호용복합 섬유산업의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세계시장 개척은 물론 전문기업 유치,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핵심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27일 익산에 소재한 섬유 전문연구기관인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을 방문해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도내 섬유산업이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북도 출연 전문연구기관의 역할을 당부하고 안전보호용복합섬유 기술개발과 관련한 주요 시설 및 전시실을 둘러보고 있다.

또한,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의 다양한 연구와 기술개발, 성과확산을 통해 전북의 섬유산업이 고부가가치 생산구조로 전환돼 미래 성장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과 토종 섬유기업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방문을 마치면서 연구원 직원들에게 "전북은 연구 개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원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재훈 기자

대장동 · 김건희 특검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8개월 뒤 본회의 상정

국회는 2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하는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여당의 반발에도 결국 '쌍특검' 모두를 패스트트랙에 올리는데 성공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되기 위해선 재적의원의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야당이 표결을 주도하자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50억 클럽' 표결에선 재석 183명 중 찬성 183표가 나왔다. '김건희 특검' 표결에서는 재석 183명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가 나와 쌍특검은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안건 설명에 나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50억클럽 명단에 포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유일하게 기소되었지만,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이는 검찰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과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초당적이고, 국민적인 공감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관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음에도 국정 운영에 큰 책임이 있는 여당은 진상을 밝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보다 이전 정부의 수사를 핑계로 상식적인 문제 제기마저 정쟁으로 일축하며 관련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8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은 약 8개월 뒤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법사위에 상정돼있는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의 경우 강은미 정의당 의원 발의안으로 180일 이내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법사위 제1소위에서 의결한 대안을 본회의 수정안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의 경우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발의안을 바탕으로 추진하되 180일 이내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수사 대상, 특검 추천 방안 등에 대해 추후 논의해 본회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초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법 등이 법사위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민주당과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했다.

양당은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50억 클럽 특검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했고 민주당·정의당 등 182명의 야권 의원은 지난 25일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뉴시스

"장수 스마트팜 단지 스마트 농업지역 지정 고시를"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보훈 · 산재병원 건립도 촉구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기동 의장)가 27일 장수 스마트팜 단지 스마트 농업지역 지정 고시와 함께 보훈병원·산재병원의 전북 건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전북의장협의회는 '나봄리조트 장수'에서 열린 제274차 월례회에서 장수 스마트팜 단지 스마트 농업지역 지정 고시 건의안과 특수목적 공공병원 보훈병원 및 농업특화 산재병원 건립 건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장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는 지방인구소멸을 막고, 미래농업 대응을 위해 조성 중이다.

협의회는 "스마트팜 단지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연계시설의 단지 내 조성이 필수지만 현행 농지법상 추진이 어렵다. 스마트농업 지정 고시와 특례 부여로 농업 혁신과 지방소멸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협의회는 "전북에는 3만명이 넘는 보훈대상자가 거주하고 있고 전남보다 산재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병원의 부재로 광주, 대전, 서울 등으로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특별자치도로 독자 권역 지위를 확보한 전북에 보훈병원과 농업특화 산재병원을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가 27일 나봄리조트 장수에서 열린 가운데 장수 스마트팜 단지 스마트 농업지역 지정 고시 촉구를 건의하고 있다.

이날 의결한 장수 스마트팜 단지 스마트 농업지역 지정 고시 건의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에, 특수목적 공공병원 보훈병원 및 농업특화 산재병원 건립 건의안은 국회와 전북도, 전북도의회에 각각 보낼 예정이다.

이기동 회장은 "시·군의회 의장들과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해결책을 찾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소통과 협력 속에서 더욱 노력하는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진형석 도의원, 평판대상 광역의원 부문 수상받아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이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평판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평판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한 해 동안 국민의 뜻을 대표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 광역의원, 자치단체장 등에 주어지는 상으로 진형석 의원은 전북에서 광역의원으로써는 유일하게 수상하는 쾌거를 냈다.

진 의원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뜻깊은 상이 주어져 더욱 사명감이 든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최근 낮아진 지방의회와 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김재훈 기자

금고형 2회시 의사면허 10년 금지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7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를 재교부받았음에도 또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10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항의의 뜻으로 표결에 불참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취소된 후 재교부 받았음에도 또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10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겠다고 민주당을 설득해 본회의 상정을 연기했다.

김 의장은 '모든 범죄'를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좁히는 대신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의과대학 설치 등 제안하며 중재를 시도했으나 끝내 설득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은 의장 중재안이 아닌 당초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뉴시스

국회, 방송법 등 본회의 부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내용 담겨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내용이 담긴 방송법 등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야당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도한 직회부한 것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재석 177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방송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또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부의 건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부의 건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과방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등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 의결했다. 여당은 반발해 퇴장했다.

방송법 등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과방위 처리 당시에도 여당 반발로 야당 단독 처리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다양한 기관, 단체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천 단체와 기관은 국회 5명,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명으로 됐다.

또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이 추천위가 3인 이하 복수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이들 후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뒤,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가 사장으로 제청해 선임하는 방향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뉴시스

도의회 행자위 · 문건위, 국외정책연수 결과 간담회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와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27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국외 정책연수 결과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자위와 문건위는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의 나킬 사, 스마트경찰서, 마스다르시티, 이집트의 관광유물부, 국가인구위원회, 코이카 이집트사무소 등 자치경찰 및 문화·관광산업 선진화 등을 위한 국외 정책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 대표를 맡은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은 "4년 만에 추진된 이번 국외 정책연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철저하고 꼼꼼한 준비를 거쳐 실시하게 됐다"며 "연수를 통해 보고 듣고 배운 내용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이스타항공 배임 · 횡령 이상직, 징역 6년 확정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0) 전 국회의원의 징역 6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경영판단의 원칙, 손해액 산정,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도의회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치지원 특위 업무보고 청취

전북도의회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27일 회의를 열어 특위 활동 계획안을 채택하고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간담회, 공동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및 세미나, 재정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지원 등 특위 활동 계획을 확정하고 집행부로부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특위 위원들은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문제로 인해 특별지자체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해당 시·군에 관할권 결정과 특별지자체 설치는 별개라는 점을 주지시키고, 특별지자체 설치 공감대 확산을 위해 공동 협력사업 발굴, 재정지원 등 유인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시·군 간 관할권 문제는 첨예한 이해관계로 도에서 관여하기 힘든 점은 이해하나, 도에서 갈등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김정기 위원장은 "우리 특위에 3개 시·군 도의원이 다 모여있는 만큼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여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및 개발 효과의 인근 지역 확산을 위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